

1. 총평

2020년 국회직 9급 행정학 개념 및 이론 문제가 10문제, 법령 문제가 8문제로 법령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다. 2020년 국회직 8급 문제에서도 총 25문제 중 법령 문제가 15문제였다.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1문제,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2문제'로서 9급 시험 수준에서는 무난하게 출제된 편이다. 다만,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공부한 수험생의 경우 10번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고(7급 인사조직론에서 출제된 적 있어 알파행정학이나 2021 핵심체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소홀히 한 경우 15번과 20번 문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90점 이상은 우수(합격권), 80점에서 85점까지는 보통, 75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고 본다. 알파행정학이나 핵심체크 교재와 강의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90점 이상 나왔을 것으로 본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총론(기초이론)	2	개념문제	1
정책학	2	이론문제	9
조직이론	6	법령문제	8
인사행정론	3	학자문제	1
재무행정론	4	사례문제	1
지방자치론	2		
행정환류론 (전자정부론 포함)	1		

- (1)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기초이론과 정책학 출제 빈도가 낮고, 조직이론 출제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면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2)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법령 문제가 8문제로 평균적인 출제 빈도보다 많이 출제된 편이다. 국회직의 경우 법령 문제의 출제 빈도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다만,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경우 25%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3. 문제의 난이도 및 문항 분석

상(1)	중상(2)	중(12)	중하(5)
10	6, 20	1, 2, 3, 5, 7, 8, 11, 14, 15, 17, 18, 19	4, 9, 12, 13, 16

- (1) 10번 문제 : 2017년 국가직 인사조직론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으로서 조금 깊게 출제된 내용이다.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알파행정학 및 핵심체크에 있는 내용이며, 강의에서 '합리적 차원' 의미를 설명할 때 본인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한 내용이다.
- (2) 6번 문제 : 기존 기출문제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 (3) 20번 문제 :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은 기존 기출문제에서 간헐적으로 출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이해할 것 이해하고 암기할 것 확실히 암기한 경우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4. 당부 사항

-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알파행정학이나 핵심체크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만 더 넓고 깊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여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3.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0 국회9급

- ① 감사원장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④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 ⑤ 국회 수석전문위원

[해설] ⑤(X).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종 류	직 위	
정무직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보좌관, 수석 비서관	국회 국회의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위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감사원 감사위원, 사무총장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국무조정실 실장, 차장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국가보훈처 처장, 차장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약처 처장
	13개 청장(국세청장, 관세청장, 통계청장, 특허청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등)	
특정직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공수처장·차장	
별정직	국회사수석전문위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일반 비서관·비서	
일반직	감사원 사무차장, 사·도선관위의 상임위원(임기제),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약처 차장	

[정답] ⑤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35-536. 2021 핵심체크, pp.243-244.

4. 예산집행의 신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에 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계속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 의결을 받으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 ④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⑤ 수입대체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이다.

[해설] ①(O).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에 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이용(移用)	전용(轉用)
차이점	내용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예산의 유용
	국회 의결	원칙적으로 필요(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예산의 유용
		불필요(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가능) 단,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의 추진 및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 불가.

- ②(X). 계속비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5년 이내(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 가능)에서는 허용된 경비 총액 범위에서 계속지출이 가능하다. 한편, 계속비 총액이나 연부액에 변동이 있을 때, 계속비 연한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 ③(O).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 사유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경우
국회의 의결	필요	불필요
재이월	가능	불가
예산의 형식적 내용	○	×

- ④(O).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⑤(O). 수입대체경비는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수입대체경비는 지출 자체가 목적이므로 수입이 수반된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711-715. 2021 핵심체크, pp.329-331.

5.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 ② 사익 극대화의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을 가정한다.
- ③ 행위자의 선호가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 ④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 ⑤ 오스트롬(Ostrom)은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의 대안으로 관할권의 중첩 등을 주장하였다.

[해설] ①(O).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②(O).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을 사익 극대화의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을 가정한다.
 ③(X). 합리적 선택이론은 행위자의 선호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반해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선호가 사회 내에서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④(O).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이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⑤(O). 오스트롬(Ostrom)은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의 대안으로 관할권의 중첩 등을 주장하였다. 오스트롬에 따르면, 공공재 공급조직의 관할 중첩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대등한 수준의 관할 중첩에 의하여 공공재 공급의 경쟁성을 높일 수 있고, 대·소(광·협)의 관할을 겹치게 하여 행정봉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143-154. 2021 핵심체크, pp.59-64.

6. <보기>의 사례 중 갈등 요인이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2020 국회9급

<보 기>

ㄱ. 예산부서와 기획부서 모두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입사한 직원을 배치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
 ㄴ. 홍보부서가 다른 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부서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해태(懈怠)하자, 법무부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ㄷ. 홍보부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지연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의하였다.
 ㄹ. 예산부서에서 배정할 예정인 5억 원의 예산을 홍보부서와 기획부서가 서로 배정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ㄴ, ㄱ,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ㄷ, ㄴ, ㄹ
- ⑤ ㄱ, ㄹ, ㄴ, ㄷ

[해설] ⑤(O). 갈등은 1) 상충되는 목표 추구, 2) 제한된 자원의 획득을 위한 경쟁, 3) 직무의 상호의존성, 4) 의사전달의 장애, 5) 지위부조화, 6) 갈등 당사자의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박스 내용에서 ㄱ.과 ㄹ.은 제한된 자원의 획득을 위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고, ㄴ.과 ㄷ.은 업무의 상호의존성 상태에서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이다.

[정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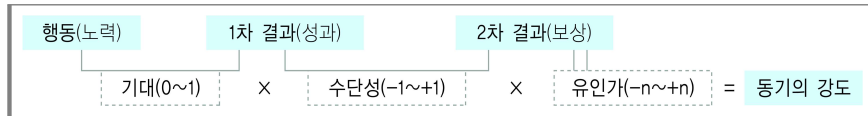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480. 2021 핵심체크, pp.218-219.

7.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기대감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관련된 믿음이다.
- ② 유의성은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 ③ 높은 성과가 항상 높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 경우 수단성의 값은 0으로 표현된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 ⑤ 선호의 강도는 개인이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받았을 때 더 선호를 느끼는 경우 정(+)의 유의성을 갖는다.

[해설] ③(X).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동기의 강도는 기대, 수단성, 유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높은 성과가 항상 높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 경우, 수단성의 값은 '1'이다.



- ①(O). 기대감(expectancy)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이것은 보통 주관적 확률로서 표시된다(0~+1).
- ②⑤(O). 유인가(유의성, 보상의 매력성, valence) : 특정 결과에 대해 한 개인이 갖는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n~+n). 부정적 보상의 경우 부(-)의 유의성, 긍정적 보상의 경우 정(+)의 유의성을 갖는다.
- ④(O).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의 강도가 기대감, 수단성, 유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기 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447. 2021 핵심체크, p.203.

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설] ①(O).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O).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강제적 휴직).
- ③(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④(X).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O).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범위>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3)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613-614. 2021 핵심체크, pp.278-279.

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② 계획 예산제도(PPBS)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도 부른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과거의 예산결정을 반성 없이 수용한다.
- ⑤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에서 참여과정을 통한 예산관리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킨다.

[해설] ①(O).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과 회계상의 계정을 연결시켜 주며,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②(X).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기능별 분류 → 사업별 분류 → 세부사업'으로

-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능별 예산 또는 활동별 예산이라고 한다.
- ③(X).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업과 예산을 연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사업별로 예산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된다.
 - ④(X).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⑤(X).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상하 조직 구성원의 참여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 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개개 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 하에 부과하여, 수행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이다. 목표관리 예산제도에서는 서류 작성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736-749. 2021 핵심체크, pp.341-346.

10. 페리(Perry)의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공공서비스 동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 ② 합리적(rational) 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과 관련 있다.
- ③ 규범적(normative) 동기의 예로 공익에 대한 봉사 및 사회적 형평의 추구가 있다.
- ④ 정서적(affective) 동기의 예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에 대한 헌신이 있다.
- ⑤ 공공서비스 동기는 금전적 보상보다 지역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무게를 둔다.

[해설] ①⑤(O). 페리(Perry)의 공공서비스동기(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공무원들의 이타적 동기를 말한다. 페리는 공공 부문의 종사자들은 민간 부문의 종사자들과 다른 직업 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하면서,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X).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에 대해 헌신하는 것은 합리적 차원의 동기에 해당한다.

합리적 차원 (이성적 계산)	합리적 차원은 공무원 개인 효용극대화 동기와 관련된다. 자신의 자아실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정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책형성 과정에의 참여 ●공공정책에 대한 일체감, 호감도와 매력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
규범적 차원 (공익 의무감)	규범적 차원은 본질적이고 이타적인 내용으로 의무감에 바탕을 둔 동기이다. ●공익봉사의 욕구 ●의무와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사회적 형평의 추구
감성적 차원 (감정적 접근)	감성적 차원은 이성이나 의무감이 아닌 감정적으로 생기는 동기이다.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한 몰입 ●선의의 애국심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445. 2021 핵심체크, p.202.

[참고] 2017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기출문제

문. 페리(Perry)의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 ① 공공봉사동기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공공 부문의 종사자들은 민간 부문의 종사자들과 다른 직업 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 ③ 감성적 차원의 동기는 공직자들이 공공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도와 매력을 지니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 ④ 규범적 차원의 동기는 공익에 대한 몰입이며, 공익에 대한 봉사 욕구, 사회적 형평 추구 등을 포함한다.

[해설] ③(X). 공직자들이 공공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도와 매력을 지니고 있느냐에 관한 것은 합리적 차원의 동기에 해당한다. 감성적 차원의 동기는 감정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한 몰입, 선의의 애국심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③

11.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복구경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며, 목적예비비는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④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제출한다.

[해설] ①(X).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의 경우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②(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X). 전용은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예산의 유용을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④(X).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이체(移替)할 수 있다(국회의 의결 불필요)

⑤(X).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648, 711-713. 2021 핵심체크, pp.329-330, 352.

12.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제도적 책임성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책임성을 의미한다.
- ② 자율적 책임성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한다.
- ③ 자율적 책임성은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강조한다.
- ⑤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 책임성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책임성을 의미한다.

[해설] ⑤(X). 제도적 책임성은 외부에서 설정된 법규와 규정에 따라야 할 책임성으로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 스스로 설정한 윤리의식에 바탕을 둔 책임성을 말한다. 따라서 제도적 책임성에 비해 자율적 책임성의 범위가 더 좁다.

제도적 책임성	자율적 책임성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	구성원 스스로 설정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
타율적·수동적·객관적 책임성(범위 좁음)	자율적·능동적·주관적 책임성(범위 넓음)
문책자의 외재성	문책자의 내재화 또는 부재
절차의 중시	절차의 준수와 책임완수는 별개의 것
공식적·제도적 통제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 없음.
판단 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없음.
제재의 존재	제재의 부재
Finer의 입장, 입법국가	Friedrich의 입장, 행정국가

[정답] ⑤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916. 2021 핵심체크, p.426.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에서

13. 집단적 문제해결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명목집단기법에서는 전통적인 회의방법과는 달리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
- ② 델파이기법을 쓰면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와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 ③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꾸미는 것이 제한된다.
- ④ 집단적 문제해결은 개인적 문제해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든다.
- ⑤ 변증법적 토론기법은 토론집단을 의견이 유사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기법이다.

[해설] ①(X). 명목집단기법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을 한 다음 해결 방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기법이다. 전통적 회의 방식과 달리 의견교환(토론)은 명시적으로 허용된 때 한해 인정된다.
 ②(O). 델파이기법은 교호작용적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성격마찰 또는 감정대립,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③(X). 브레인스토밍은 비판 금물, 자유분방, 편승 가능(무임승차 가능, piggy-backing,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형), 아이디어의 양 중시(질보다는 양의 원칙) 등을 속성으로 한다.
 ④(X). 집단적 문제해결은 여러 사람이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해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든다.
 ⑤(O). 변증법적 토론기법은 한 팀은 특정 대안에 대해 찬성하는 역할을 맡고, 다른 한 팀은 반대하는 역할을 맡으며,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노출시키고, 이어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형성한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256, 260-263. 2021 핵심체크, pp.109-112.

14.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기재순위 등) 제1항의 규정을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는?

2020 국회9급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 ① 대통령선거
- ② 국회의원선거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
- ④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선거
- ⑤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

[해설] ④(O). 문제의 핵심은 정당 공천 인정 여부와 관련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 및 정당 표방이 인정되고 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 및 정당 표방이 금지되어 있다.

구 분	선거구제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시·도의원선거	소선거구제(지역구 별로 1인)	허용	도입
시·군·자치구의원선거	중선거구제(지역구 별로 2인~4인)	허용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허용	-
교육감선거	-	배제	-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866. 2021 핵심체크, pp.407.

15.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2020 국회9급

- ① 「유통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유통세 총액의 일부 금액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일부 금액
-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 ④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 ⑤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해설] ③(O).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905. 2021 핵심체크, p.420.

16.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분배정책의 예로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이 있다.
- ② 재분배정책의 예로 누진세, 사회보장책 등이 있다.
- ③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④ 기업에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 ⑤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달라질 수 있다.

[해설] ①(X).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분배정책의 예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 구축, 국유지 불하정책, 연구개발사업,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 군수품 구매, 국공립학교 운영, 박물관·미술관 건립, 공원 조성 등이 있다.

⑤(O). 로위(Lowi)는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가 달라지고, 정책과정(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한편,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도 달라진다고 보았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220-223. 2021 핵심체크, pp.93-94.

17.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을 구성하는 기본 부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전략부문(strategic apex)은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이다.
- ②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 ③ 중간부문(middle line)은 핵심운영부문과 전략부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 ④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
- ⑤ 기술구조부문(technostructure)은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해설] ④(X).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형성하는 곳은 전략부문이다. 핵심 운영 부문은 작업계층을 말하며,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⑤(O). 기술구조부문(technostructure)은 조직 내의 과업(업무) 과정과 산출물이 표준화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석가로 구성된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360. 2021 핵심체크, p.158.

18.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설] ③(X).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의견이 나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결정한다.

①②④⑤(O).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모두 옳은 지문이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13-514. 2021 핵심체크, pp.233-234.

19. 조직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기능구조는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 ② 사업구조는 산출물별 생산라인의 중복에 의해 규모경제의 실현이 어려워 효율성 손실이 있다.
- ③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지향한다.
- ④ 수평구조는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식이다.
- ⑤ 네트워크 구조는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 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해설] ①(X). 기능구조는 부서별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 변화에 둔감하다.

②(O).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둔 부서화 방식으로, 생산라인의 중복으로 인해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③(O).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팀을 혼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장방형 조직, 입체적 조직)이다. 즉,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U형)와 사업구조(M형)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이다.

④(O). 수평구조는 조직구조가 과업, 기능,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핵심 과정에 기초하며, 핵심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과정 조정자(process coordinator)가 진다.

⑤(O). 네트워크 구조는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에 대한 직접 통제의 곤란으로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대리인의 기회주의 행동 방지를 위한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357-358, 410-416. 2021 핵심체크, pp.157, 184-186.

20.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020 국회9급

- ① 재정 건전성의 원칙
- ②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 ③ 통일성의 원칙
- ④ 국민참여의 원칙
- ⑤ 투명성의 원칙

[해설] ③(X). 통일성의 원칙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 (1)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656. 2021 핵심체크, p.301.